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 노동권만 지키면 정말 괜찮나?

임용현 상임활동가

반도체 메모리 팹(생산공장) 확장, AI 데이터센터 신설, 피지컬 AI 투자를 합쳐 총 4,7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이하 ‘메가프로젝트’)가 열린 지 벌써 두 달이 흘렀다. 이날의 발표는 보고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가히 대국민 선전포고라 할 만한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실제로 정부는 전시 체제를 방불케 하는 용어인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을 거침없이 구사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언사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메가프로젝트 달성에 치중하기 위해 사실상 전시 국가체제에 준하는 산업 재편과 자원 동원에 나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사활을 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매우 발 빠르게 이뤄지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국민보고회 이후 전력, 용수, 토지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비롯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인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불법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행정상 우대 지원만으로는 과감한 속도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도 내놓았다. (인프라 제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필수 공공재 사적 전유와 약탈의 가속화

메가프로젝트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발

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는 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초격차 확보가 핵심축에 놓여 있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 또한 삼성, SK, 현대차 등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정한 계획표에 따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메가프로젝트는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재벌 특혜 산업정책의 확장판이자 결정체다. 메가프로젝트가 표방하는 ‘지역 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는 결국 토지와 용수, 전력 등 필수 공공재에 대한 사적 자본의 전유와 약탈을 전 국토에 걸쳐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정부가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보조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개별 자본의 고삐 풀린 경쟁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가 탈탄소 전환을 또다시 먼 미래의 목표로 미룰 뿐만 아니라,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생태수용력을 고갈 상태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후정의운동 진영의 강력한 경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노동특례 넘어 규제 특례 대잔치, 메가특구법

이런 재벌기업, 자본 특혜 정책의 정점에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특구법’)이 있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이 법안에는 일정한 소득과 업무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직·관리직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방식(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방안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총망라돼 있었다. 나아가, 메가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도 확대하는 등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계획까지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 법 제정이 메가프로젝트 본격화의 기폭제일 뿐 아니라, 친자본 산업정책의 정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라는 제하의 8월 3일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노동권 예외 지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AI 사회 대전환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메가특구 법안에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고용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다양한 규제 특례 방안을 국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2026.06.03. 산업통상부 보도 설명 자료)라



▲ 2026.8.11 청와대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철폐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모습. 사진 : 한노보연

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애초 8월 중 메가특구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향후 노동계와 관계 부처(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다시 잡았다. 노동권 침해 우려가 솔하게 쏟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메가특구법상 노동시간·고용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아직 쟁점화되지 않은 여타 부문에 대한 규제 특례 조항은 예정된 순서를 그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파괴력은 사실 이 지점에 있다. 정부가 미리 마련해 둔 300여 개의 규제 특례 항목 중에서 메가특구 입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 내용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 또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규제 특례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각기 다른 만큼 현장 수요에 맞게 특례를 골라 쓰도록 해당 기업과 지자체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노동 특례라는 일부 독소조항을 걷어내더라도 기후·생태 위기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메가특구법과 메가프로젝트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 년여 전 반도체 특별법 저지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가 완강히 반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예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노동·반환경·재벌 특혜 악법의 본질은 고스란히 남아, 반도체 재벌들에 안전과 환경 규제 완화, 용수와 전력 공급 특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본격화할 메가특구법 저지-메가프로젝트 규탄 투쟁은 적어도 그때와는 달라야 한다. 알터